

Today's News Clip

오늘의 주요기사

2023년 9월 27일 수요일

새로운 강원

행복한 미래

함께 여는 강원특별자치도 의회

소통하는

실천하는

신뢰받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목 차

江原日報		道-中 교류 확대 공로자 4명 감사패 수여	1
강원도민일보	온라인	도의회, 한중경제문화교육협회에 감사패 전달	1
江原日報		“강원특별자치도 통일 시대 평화의 관문으로 성장”	2
강원도민일보		제 21기 민주평통 강원지역회의 출범	3
江原日報		“강원~다낭 하늘길 열자”	4
江原日報		베트남 다낭 직항노선 협의	5
강원도민일보		도의회-베트남 다낭 대표단 간담회	5
江原日報		'춘천권 12명·원주권 15명' 불꽃경쟁 예고	6
江原日報		내년 4·10 총선 누가 뛰나	7
江原日報	온라인	'제일경제도시 원주' 마중물 부론일반산단 대역사 시작	8
세계타임즈	온라인	“이지영 도의원, 효과 97% 대상포진 사백신 지원 조례안 ...	9
신아일보	온라인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이지영 의원, 대상포진 사백신 지원 조...	10
강원도민일보		시 재향군인회 8보병사단 참전전몰장병 추모	11
강원도민일보		인제 기린·상남 유통센터, 농산물 신선 유통 거점 기대	11
江原日報		노인의날 기념식	11
인제인터넷		민족통일인제군협의회,제12대 박기선 회장 취임![1/4]	12
인제인터넷		민족통일인제군협의회,제12대 박기선 회장 취임![2/4]	13
인제인터넷		민족통일인제군협의회,제12대 박기선 회장 취임![3/4]	14
철원신문	온라인	제4회 충무공 김응하 장군 문예공모전 시상식 개최	15
강원도민일보	16면	정선주민 화합 공간 고한복합문화센터 준공	16
강원도민일보	20면	대한민국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16
江原日報	24면	[The 초점] ‘재정 보릿고개 시대’ ... 민생경제 위한 대의기...	17
강원도민일보	01면	"강원형 국제학교 도민이 수용할 수 있는 모델로"	18
강원도민일보	04면	강원특별법 3차 개정 토론회	18
강원도민일보		"정책 실효성 의문 제기 인상적...농업인 이슈 집중 조명을"...	19
江原日報	온라인	[동정] 강정호.박호균 도의원	21
江原日報	03면	200일도 안 남은 총선 선거구 확정 안갯속	22

江原日報	04면	교권전담변호사 3개월 만에 공석 위기	23
江原日報	04면	道 호우·태풍 카눈 피해 복구비 496억원 확정	23
강원도민일보	01면	사회적경제 기업 예산 급감... 강원기업 존폐 기로	24
강원도민일보	02면	"양구~영천 남북9축 고속도 조기 건설 국가계획 반영을"	24
강원도민일보	05면	화천 양돈농장서 또 돼지열병... ASF 4년째 현재진행형	25
강원도민일보	19면	[사설] 인구 감소 지역 연대 지지한다	26
강원도민일보	19면	[사설] 강원여행 경쟁력 '단풍' 살려야	27
江原日報	25면	[사설] 이대로 가면 지역소멸, 인구 대책 발상 바뀌어야	28
江原日報	25면	[사설] 道 출자·출연기관, 더는 혈세 축내서는 안 된다	29

江原日報



◇권혁열 강원특별자치도의회장은 26일 도의회 의장실에서 강원자치도와 중국 간 경제·문화·교육 교류 확대를 위해 활동한 한중경제문화교육협회 회원 4명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道-中 교류 확대 공로자 4명 감사패 수여

도의회서 전달식 가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권혁열 의장이 26일 도의회 의장실에서 강원자치도와 중국 간 경제·문화·교육 교류 확대를 위해 활동한 한중경제문화교육협회 회원 4명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전달식에는 권혁열 의장, 원제용 도의회 한중국제교류협회장, 김희철 도의원이 한중경

제문화교육협회 신경숙 이사장, 임홍근 회장, 김윤수 강원지회장, 장영숙 강원지회 사무국장 등이 참석했다.

2004년 외교부에 등록된 사단법인 한중경제문화교육협회는 한중 양국의 우호교류를 목표로 장학금 전달, 연탄 봉사, 김장 나누기 등 봉사활동을 진행했고 강원지회는 2021년 구성해 활동해왔다.

이현정기자 together@

강원도민일보

도의회, 한중경제문화교육협회에 감사패 전달

이설화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장 권혁열)가 26일 의장실에서 한중경제문화교육협회(이사장 신경숙) 회원 4명에게 강원도와 중국 간 경제, 문화, 교육 교류 활동에 감사의 뜻을 담아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 자리엔 원제용 도의회 한중국제교류협회장, 김희철 도의원이 참석했다. [도의회 제공]



▲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장 권혁열)가 26일 의장실에서 한중경제문화교육협회(이사장 신경숙) 회원 4명에게 강원도와 중국 간 경제, 문화, 교육 교류 활동에 감사의 뜻을 담아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 자리엔 원제용 도의회 한중국제교류협회장, 김희철 도의원이 참석했다. [도의회 제공]

江原日報

2023 09 27 ()

“강원특별자치도 통일 시대 평화의 관문으로 성장”

민주평통 강원회의 출범식
통일준비 역량 강화 논의

제21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강원지역회의가 26일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민주평통 강원지역회의는 이날 오후 2시 춘천 한림대 일송아트홀에서 ‘제21기 강원지역회의 출범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출범대회에는 조창진 강원부지사, 석동현 민주평통 사무처장,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권혁열 도의장, 도내 18개 시·군 지역협의회장 등이 참석했다.

행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영상 메시지, 자문위원 선서, 간



◇제21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출범식이 26일 한림대 일송아트홀에서 조창진 강원부지사, 석동현 사무처장 및 자문위원과 김진태 도지사, 권혁열 도의장을 비롯한 내빈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신세희기자

부위원 소개, 지역부의장 및 사무처장의 인사말, 도지사 및 도의장의 축사, ‘제21기 민주평통 활동방향’ 보고, 통일·대북 정책 특별강연, 결의문 낭독 및 채택, 통일퍼포먼스 순으로 진

행됐다. 이날 참석한 도내 간부위원과 자문위원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통일철학을 공유하고, 국민과 함께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통일준비 역량을 강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조창진 부의장은 “강원자치도가 더 이상 분단의 상징이 아닌 자유민주주의 통일 시대 한반도의 중심이자 평화의 관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석동현 사무처장은 “강원지역회의가 가장 모범적이고 열정적인 회의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진태 지사는 “강원지역회의가 강원도의 드림팀으로 막중한 역할을 잘 수행해주시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권혁열 의장은 “앞으로 한반도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통일을 위한 정책적 역량을 발휘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권순찬기자 sckwon@

강원도민일보

2023 09 27 ()



제21기 민주평통자문회의 강원지역회의 출범대회가 26일 한림대학교 일송아트홀에서 열렸다. 김정호

제 21기 민주평통 강원지역회의 출범

권혁열 의장 “자문위원 해안 공유를”

제21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강원 지역회의는 26일 춘천 한림대 일송아트홀에서 도내 18개 지역협의회장, 자문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출범대회를 개최했다.

조창진 민평통 신임 강원부의장은 이날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통일미래 준비를 위해 각 지역의 통일 역량과 의지의 결집을 주도할 자문위원들의 활동에 기대가 크다”고 강조했다.

석동현 사무처장은 “남북 통일에 있어 강원도가 차지하는 지역 중요성이

매우 크다”며 “가장 모범적이고, 열정적인 지역회의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했다. 김진태 도지사는 “감히 지금 대한민국은 이념적 내전상태라고 생각한다”며 “‘민주’를 이야기하는데, 인민민주주의라면 어떻게 하겠느냐. ‘평화’를 이야기하는데가짜평화라고 하면 단호히 거부할 용기도 있어야 한다”고 했다.

권혁열 도의회 의장은 “북한의 강경한 태도는 계속되고 있고, 안정된 한반도 만드는 일은 요원하다”며 “남북관계를 위해 소중한 해안을 공유해달라”고 했다. 민주평통 강원지역회의 자문위원은 835명이다. 임기는 2년. 이철화

江原日報

2023 09 27 ()



“강원~다낭 하늘길 열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 베트남 다낭시 대표단 간담회가 26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열린 가운데 참석자들이 단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최두원 인턴기자

江原日報

2023 09 27 ()

베트남 다낭 직항노선 협의 도의회-다낭시대표단 간담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26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베트남 다낭시 대표단과 간담회를 갖고 적극적인 교류와 협력을 다짐했다. 특히 강원자치도와 다낭시 간의 직항노선을 개설해 협력을 이어가자는 의견을 교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창수 도의회 부의장, 정재웅 사회문화위원장, 심오섭 사회문화위원회 부위원장, 박관희·유순옥·원미희 도의원, 강옥희 강원관광재단 대표, 베트남 다낭시의회 전 푸옥 손(Tran Phuoc Son) 부의장을 비롯한 다낭시 대표단이 참석했다. 다낭시 대표단은 이날 간담회에 앞서 강원관광재단과 관광 업무협의를 하고 관광교류협력 의향서도 체결했다. 전 푸옥 손 부의장은 “한국 관광객들이 다낭에 많이 방문하고 있을뿐 아니라 다낭 역시 한국과의 교류 확장을 바라고 있다”며 “관광 분야를 비롯해 여러 면에서도 협력하면 좋겠다”고 했다.

한창수 도의회 부의장은 “강원 관광과 경제 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조하며 같이 발전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재웅 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장은 “직항노선 개설과 연평대별 타지 관광교류 등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이현정기자

강원도민일보

2023 09 27 ()



도의회-베트남 다낭 대표단 간담회 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위원장 정재웅)와 베트남 다낭시대표단이 26일 도의회에서 간담회를 가졌다. 사진제공=도의회

江原日報

2023 09 27 ()

‘춘천권 12명·원주권 15명’ 불꽃경쟁 예고

〈춘천·철원·화천·양구갑·을〉

〈원주갑·을〉

내년 4·10 총선 누가 뛰나

▶입지자 프로필 2면·관련기사 3면

강원권 내년 4·10 국회의원 선거에 40여명의 주자가 뛰어 들었다.

자천타천 거론되고 있는 42명의 입지자는 6개월여 남은 총선에서의 승리 기운을 선점하기 위해 이번 추석 명절을 기회로 삼아 민심 잡기에 사활을 걸었다.

현행 전체 8석의 선거구를 전제로 주자가 가장 많은 곳은 ‘원주 을’이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현역 국회의원을 포함해 총 11명이 거론되면서 경쟁률은 무려 11대1이다.

이곳은 국민의힘의 사고당협위원회로 위원장 지리가 1년 넘게 공석으로 유지되면서 총 8명이 위원장 공모에 도전, 총선 주자로 분류돼 입지자가 늘어났다.

여기에 국민의힘이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에 임명된 장미란 선수를 ‘새로운 카드’로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긴장감이 더해지고 있다.

‘춘천-철원-화천-양구갑·을’ 선거구도 각 6명씩 총 12명이 거론된다. 더불어민주당 허영(갑), 국민의힘 한기호(을) 현역 지역구 국회의원에 비례 국회의원과 변호사, 기업인, 언론인 출신들이 대거 도전장을 내면서 일찌감치 불꽃 튀는 경쟁이 시

강원권 8석→9석 복원 관심 속

자천타천 거론되는 인물 ‘42명’

추석 맞아 지역 민심잡기 돌입

‘정부 안정 vs 정권 심판’ 구도

입지자 중도층 표심 공략 시활

작됐다. 정당별로 나눠보면 국민의힘 22명, 더불어민주당 15명, 무소속 4명 등이다.

내년 총선은 윤석열 정부 출범 3년 차에 치러지는 것이기 때문에 중간 평가 성격이 짙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심판론을 앞세우는 반면, 국민의힘은 국정 안정론을 기조로 세우고 ‘거대 야당 심판론’을 꺼내들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총선 승리가 절실하다. 국회의 ‘여소야대’ 지형에서는 입법 과제를 해결하기 쉽지 않아서다.

더불어민주당도 이번 총선에서 지

난 대선과 지방선거의 연패를 끊어 내야 차기 대선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물러설 수 없다.

선거가 다가올수록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른 선거제 개편 및 선거구 획정도 큰 관심사다.

현재 8석을 유지하고 있는 강원도의 의석수가 9석으로 복원되는 것과 함께 ‘춘천 단독분구’를 요인 삼아 선거구 재획정 협상 테이블에 오를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된다.

서울=이하늘기자 2sky@kwnews.co.kr

2023 09 27 ()

江原日報

※입지자 순서는 현역·정당·가나다 순(현행 8개 선거구 유지 전제), 정당 표기(국힘=국민의힘, 민주=더불어민주당, 진보=진보당, 무=무소속)

춘천-철원-화천-양구 갑

 허영 (민주·53) 현 국회의원	 노용호 (국힘·52) 현 국회의원(미래)	 강대규 (국힘·38) 변호사	 김혜란 (국힘·47) 변호사	 박영준 (국힘·59) 전 SK그룹 수석스쿠터팀 부팀장	 김창수 (민주·64) 현 남북경협추진단 대표
---	---	--	--	---	--

춘천-철원-화천-양구 을

 한기호 (국힘·71) 현 국회의원	 이민찬 (국힘·39) 현 중앙당 상근부대인 사	 허인구 (국힘·64) 전 G1방송 사장	 유정배 (민주·58) 전 대한석탄공사 사장	 전성 (민주·65) 현 지역위원장	 최문순 (민주·67) 전 도지사
---	---	--	--	--	--

원주갑

 박정하 (국힘·57) 현 국회의원	 여준성 (민주·52) 현 정책연구소 원주양떼길 회장	 원창목 (민주·63) 현 지역위원장	 최석 (민주·46) 현 민영행위부 대표
---	--	--	---

원주을

 송기현 (민주·59) 현 국회의원	 권이중 (국힘·51) 변호사	 강기홍 (국힘·45) 현 강원지도의회 부의장	 박동수 (국힘·65) 변호사	 안재윤 (국힘·58) 현 대교국제대 대표	 윤용호 (국힘·67) 현 민주평통 원주사업부장	 장승호 (국힘·53) 현 한국시멘트 대표	 전병선 (국힘·66) 전 원주시의원	 최재민 (국힘·40) 현 강원지도의회	 최혁진 (민주·53) 전 대통령비서실 사회정책제보서관 제2차장	 장미란 (무·39) 현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장
---	---	---	---	---	--	---	---	--	--	---

강릉

 권성동 (국힘·63) 현 국회의원	 이영랑 (국힘·47) 현 한국미래디자이너 대표	 김우영 (민주·54) 현 강원지도농업 위원장	 장지창 (진보·33) 현 지역위원장	 임명희 (무·42) 현 시민주당 중앙위원회 대표
--	--	---	---	--

동해-태백-삼척-정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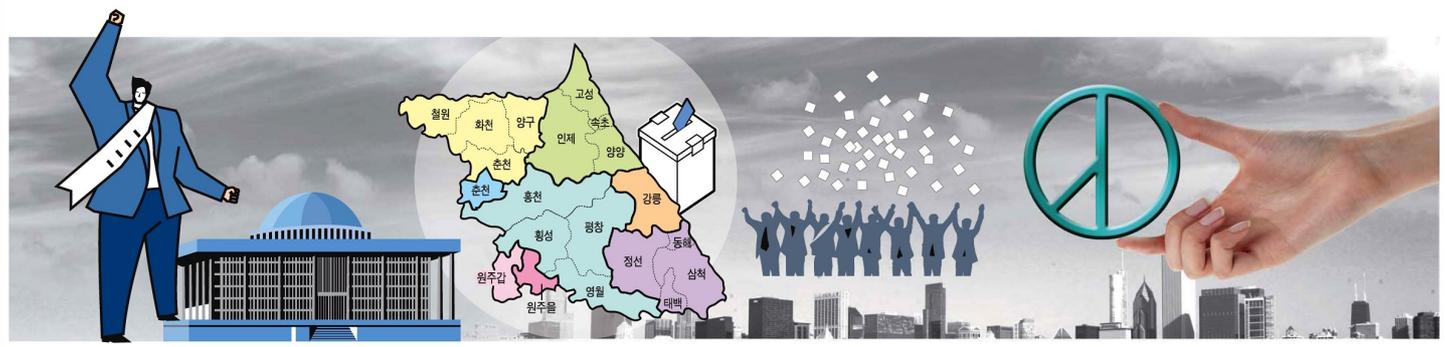
 이철규 (국힘·66) 현 국회의원	 한호연 (민주·58) 현 지역위원장
---	--

속초-인제-고성-양양

 이양수 (국힘·56) 현 국회의원	 김도균 (민주·58) 전 육군수도령위 사령관	 박상진 (민주·56) 현 지역위원장	 안경모 (무·65) 전 청와대 관공보서관
---	--	--	--

홍천-횡성-영월-평창

 유상범 (국힘·57) 현 국회의원	 홍병천 (국힘·65) 전 농림축산 검역본부 장	 허필홍 (민주·59) 현 지역위원장	 박선규 (무·66) 전 영월군수
---	--	--	--



2023 09 26 ()

江原日報

'제일경제도시 원주' 마중물 부론일반산업단 대역사 시작

부론면 노림리 일원서 착공...2025년 준공 목표
반도체 산업 등 육성.양질의 일자리 창출 기대



원주 부론일반산업단지 착공식이 26일 부론면 노림리 조성예정지 현장에서 김진태 강원자치도지사와 원강수 시장, 박정하 국회의원, 이재용 시의장, 정운찬 전 국무총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원주 제일 경제도시 원주의 마중물이 될 부론일반산업단지가 15년여의 기다림 끝에 첫삽을 뚫었다.

원주시는 26일 부론면 노림리 부론산단 조성 예정지 현장에서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와 원강수 시장, 박정하 국회의원, 이재용 시의장, 김기홍 도의회 부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부론일반산단 착공식을 가졌다.

원 시장은 "인구 100만명 도시로 성장하기 위해 기업을 담을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급선무"라며 "부론일반산단 조성은 이제 시작점이다. 원주 곳곳에 기업으로 채울 공간을 조성하고, 정주여건 개선에도 가열차게 나서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부론일반산단의 성공은 국가산업단지 조성의 토대가 된다"며 "부론일반산단과 국가산단의 연착륙을 위한 부론IC 개설이 숙제인 만큼, 국비 확보를 위해 적극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정하(원주갑) 국회의원은 "강원자치도의 많은 숙제를 떠안았지만, 부론IC 개설에 따른 국비 확보는 국회 차원에서의 예산 마련에 적극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착공식에는 정운찬 전 국무총리가 기업투자유치 전문기업 상임고문으로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정 전 총리는 "오랜 산고 끝에 시작한 부론산단이 예정대로 준공돼 강원자치도 산업 중심지로 우뚝 설 수 있도록 힘껏 돕겠다"고 말했다.

1,600억 원의 민간자본이 투입되는 부론일반산단은 부론면 노림리 일원 60만9,000㎡ 규모로 조성되며, 2025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강원자치도와 시는 부론일반산단 조성 시작으로 민선 8기 핵심과제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지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2023 09 26 ()

세계타임즈

“이지영 의원, 효과 97% 대상포진 사백신 지원 조례안 발의”



[강원도 세계타임즈=김민석 기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안전건설위원회 이지영 의원(민주당, 비례)이 강원도민을 대상으로 대상포진 사백신을 지원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지난 18일 발의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65세 강원도민이면 유전자재조합 백신인 대상포진사백신을 2회 접종 받을 수 있다.

이지영 의원은 “최근 대한감염학회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암 환자나 장기이식 등으로 인한 면역저하자들은 대상포진 예방을 위해 생백신을 접종할 수 없고, 유전자재조합 사백신 접종만을 권고하고 있는 반면, 대다수 지자체에서는 재정적 부담으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백신을 ‘생백신’으로 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이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면역력이 약한 어르신들을 위한 맞춤형 대상포진 예방접종이 제대로 지원되어, 대상포진 질환으로부터 어르신들의 고통을 덜어드리고, 예산까지 절감해 나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실제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예방접종자문위원회(ACIP)는 생백신의 효과가 떨어진다는 이유로 사백신 접종을 권장하고 있다. 또 캐나다 국립예방접종자문위원회(NACI) 및 독일 상임백신위원회(STIKO) 등에서도 50세 이상 성인에게 사백신 접종을 권장했다.

2023 09 26 ()

신아일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이지영 의원, 대상포진 사백신 지원 조례안 발의

조덕경 기자

높은 대상포진 사백신 접종해야 어르신 고통도 예산도 절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안전건설위원회 이지영 의원(민주당, 비례)이 강원도민을 대상으로 대상포진 사백신을 지원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지난 18일 발의했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안전건설위원회 이지영 의원(민주당, 비례)이 강원도민을 대상으로 대상포진 사백신을 지원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지난 18일 발의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65세 강원도민이면 유전자재조합 백신인 대상포진사백신을 2회 접종 받을 수 있다.

이지영 의원은 "최근 대한감염학회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암 환자나 장기이식 등으로 인한 면역저하자들은 대상포진 예방을 위해 생백신을 접종할 수 없고, 유전자재조합 사백신 접종만을 권고하고 있는 반면, 대다수 지자체에서는 재정적 부담으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백신을 '생백신'으로 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면역력이 약한 어르신들을 위한 맞춤형 대상포진 예방접종이 제대로 지원되어, 대상포진 질환으로부터 어르신들의 고통을 덜어드리고, 예산까지 절감해 나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실제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예방접종자문위원회(ACIP)는 생백신의 효과가 떨어진다는 이유로 사백신 접종을 권장하고 있다. 또 캐나다 국립예방접종자문위원회(NACI) 및 독일 상임백신위원회(STIKO) 등에서도 50세 이상 성인에게 사백신 접종을 권장했다.

[신아일보] 조덕경 기자

jogi4448@naver.com

2023 09 27 ()

강원도민일보

인제 기린·상남 유통센터, 농산물 신선 유통 거점 기대

선별집하장·저온저장시설 구축

인제 기린·상남 농산물유통센터가 내달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가면서 지역 신선농산물 유통 거점으로서의 역할이 기대되고 있다.

인제군 기린·상남 농산물유통센터 준공식이 오는 10월 5일 상남면 하남리 101의5번지 일원에서 최상기 군수, 이춘만 군의장과 김재규 군의원, 엄윤순 도의원, 지역 사회기관 단체장,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다.

기린·상남 농산물 유통센터는 행정안전부 특수상황지역개발 공모사업으로 확보한 국비 20억원 등 총 49억원을 투입, 건축면적 1816㎡의 규모로 지난 2022년 2월 착공해 지난 8월 완공했다.

센터에는 농산물 선별·집하장, 저온저장 시설, 교육장, 사무공간 등이 마련돼 있는 것은 물론 랩핑기, 테이핑기, 컨베이어벨트, 선별작업대, 삼면포장기 등 선별과 포장을 위한 장비 등도 갖춰져 있다.

센터가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가면 생산 현장에서 농산물의 공동선별과 포장이 가능해질 뿐 아니라, 저온저장으로 상품 출하시기도 조절할 수 있어 신선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진교원

강원도민일보

2023 09 27 ()



시 재향군인회 8보병사단 참전전몰장병 추모
강릉시 재향군인회 주관, 2023년 제8보병사단 참전전몰장병 추모행사가 26일 교동 말나눔터 공원에서 심오섭 도의원, 박흥석 재향군인회장을 비롯한 보훈단체, 시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2023 09 27 ()

江原日報



노인의날 기념식 제27회 철원군 노인의날 기념식이 26일 철원실내체육관에서 이현중 철원군수, 한종문 철원군의회부의장, 김정수 강원특별자치도의회원과 지역 어르신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2023 09 26 ()

민족통일인제군협의회, 제12대 박기선 회장 취임!



민족통일인제군협의회는 9월 25일 제11대 조철환 회장에 이은 제12대 회장으로 박기선 회장의 취임식을 가졌다.



▲ 민족통일인제군협의회 제12대 박기선 회장 취임

박기선 회장은 취임사에서 "민족통일협의회는 민족의 영원인 평화통일에 필요한 민족의 역량배양을 목적으로 1981년 설립되어 현재 17개 시도협회에 10만여명의 회원을 가진 사단법인이다. 앞으로 통일 준비를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펼쳐 나갈 것이며 회원 배가 및 조직 활성화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민족통일인제군협의회 제12대 박기선 회장 취임/ 회장 임명장 수여



▲ 민족통일인제군협의회 제12대 박기선 회장 취임/ 김남구, 김두성 부회장 임명



▲ 민족통일인제군협의회 제12대 박기선 회장 취임/ 김헌래,이만철 고문 위촉



▲ 민족통일인제군협의회 제12대 박기선 회장 취임/민족통일기 전달



▲ 민족통일인제군협의회 제12대 박기선 회장 취임/이귀인 강원특별자치도협의회회장



▲ 민족통일인제군협의회 제12대 박기선 회장 취임/ 배상요 부군수



▲ 민족통일인제군협의회 제12대 박기선 회장 취임/엄윤순 도의원



▲ 민족통일인제군협의회 제12대 박기선 회장 취임

이날 취임식은 국민의례와 내외빈 소개에 이어 임명장 수여, 민족통일기 전달, 고문 위촉, 이귀인 민족통일 강원특별자치도협의회장의 축사와 배상요 부군수의 축사, 엄윤순 도의원의 축사, 기념촬영의 순으로 진행됐다.

[인제인터넷신문]이강희 기자

2023 09 26 ()

제4회 충무공 김응하 장군 문예공모전 시상식 개최

-26일 철원포충사 경내 50명 수상 -“선양사업 더욱 활성화되길 기대”



철원포충사(원장 전현일)은 26일 요동백 영의정 충무공 김응하 장군 탄신 443주년을 기념하고자 제4회 충무공 김응하 장군 문예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날 시상식은 참석자 소개, 국민의례, 애국가 제창, 순국선열·호국영령 묵념, 공모전 경과 보고, 수상자 시상, 전현일 원장의 환영사, 이현종 군수·정문걸 교육장·한종문 철원군의회 부의장·엄기호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의 축사가 이어졌다.

총 177건의 작품이 응모했으며, 초등부 시·산문·시화·그림 부문에서 42명, 중고등부 수필 부문에서 3명, 일반부 수필 부문에서 5명, 지도교사상 4명, 총 50명이 수상했다.

전현일 원장은“충무공 김응하 장군 문예 공모전에 참여하고, 이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해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며“공모전을 통해 충무공 김응하 장군의 선양 사업이 더욱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참고로, 문예 공모전은 2019년부터 시작하여 김응하 장군의 선양사업이 점차 확산 되고 있다. 충무공 김응하 장군의 선양사업을 하는 단체로는 안동김씨 대종회, 김응하 장군 선양사업회, 철원향교 청년 유림과 포충사 회원들로 구성된 김응하 장군 역사연구회가 있다.

철원포충사는 1665년 충무공 김응하 장군은 모시는 사단으로 현재 철원을 화지리에 소재하고 있다. 1871년(고종8) 대원군에 의한 서원철폐 때에도 특별히 존속되었다. 건물을 6·25전쟁 때 불타버리고, 현재는 김응하장군묘비(강원도 유형문화재 제105호)만 남아있다.

관리자 (korea78123@hanmail.net)

강원도민일보

2023 09 27 ()

16

정선주민 화합 공간 고한복합문화센터 준공

142억원 투입 지상 8층 규모 주차장·독서실·강당 등 조성 “지역 커뮤니티 구심체 역할”

정선 고한지역 주민들의 문화와 복지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공간이 탄생했다.

정선군은 26일 고한읍 고한리 274-13번지 일원에 고한복합문화센터 신축사업을 완료하고 준공식을 개최했다. 이날 준공식에는 최승준 군수를 비롯해 김기철 도의원, 배왕섭 군의회 부의장, 송수욱·전광표·조현화 군의원, 천웅 정암사 주지스님, 심재복 정선문화원장, 이태희 고한읍주



정선 고한복합문화센터 준공식이 26일 고한읍 고한리 현지에서 최승준 군수 주민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민자치회장, 한우영 고한읍변영회장, 김규옥 고한읍시장협의회장 및 주민 150여 명이 참석했다. 고한복합문화센터는 142억원을 들여 지난 2021년 7월 지상 8층, 대지면적

1365㎡, 건축면적 4840㎡ 규모로 착공, 지난 6월 준공됐다.

1~4층까지는 주차장으로 조성, 67대의 차량을 주차시킬 수 있다. 5층은 댄스연습실, 밴드연습실, IT교육실

등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생활문화센터, 6층에는 독서실, 동아리방, 노래방, VR체험방 등 청소년이용시설, 7층은 공동육아나눔터, 강당 등 아동 및 기타 시설로 조성돼 주민들의 복합문화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군은 고한복합문화센터 건립으로 이 지역 주차난 해소는 물론 시가지 접근성 향상을 위한 주거단지 보행네트워크 구축 등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승준 정선군수는 “고한읍 아동·청소년·주민 등 전세대가 함께 할 수 있는 복합공간으로 지역 커뮤니티의 구심체 역할이 돼 소통과 화합의 공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유주현 joohyun@kado.net

강원도민일보

2023 09 27 ()

20



대한민국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대한민국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제10대 하반기 제1차 정기 회의가 지난 25일 세종 정부 컨벤션센터에서 심영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운영위원장과 시도 운영위원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江原日報

2023 09 27 ()

24

‘재정 보릿고개 시대’ ... 민생경제 위한 대의기관의 역할

The 초점



이무철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지방교부세 급감 전망
강원 건축재정 불가피
균형적 예산편성 중요

국가재정 현황 기획재정부 국세수입 재추계 결과에 따르면, 올해 국세수입예산은 당초계획 대비 59조원이 부족하다고 발표했다. 기업실적 악화에 따른 법인세 감소와 자산시장 침체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소에 따른 것으로, 재정소크가 국가적인 위기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따라 지자체·교육청에 배분되는 지방교부세(금)가 23조 원 내외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강원 자치도의 초건축재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강원자치도 재정여건도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경기 침체 장기화와 부동산 거래 감소에 따라 취득세 감소와 지방교부세 저조 등으로 내년도 금년 대비 큰 폭의 세수 감소가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저출산·고령화 지원 등 복지수요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신성장·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재정 수요는 가파른 상승이 예상된다. 올해는 지방세 약 2,000억원, 지방교부세 약 2,100억원, 총 4,100억원 이상의 세수가 계획 대비 덜 걷힐 것으로 전망하는데, 도정 운영에 크나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도 집행부는 모든 자체사업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낭비성지출은 철저히 삭감하는 등 사업

효과성 및 투자 우선순위에 따른 선택적 집중투자를 계획하고 있다고 한다. 특히 도 자체사업은 금년 대비 30% 절감을 추진하는 등 고강도 건축재정안을 마련하고 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 재정건전성 유지와 민생안정의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강원자치도 출범에 따른 도정 주요 시책 사업들과 신청사 이전 등 중장기적 현안사업이 재정한과와 건전재정 기조 속에서 위협받고 있는 상황으로 도 자체사업의 경우, 세수 부족 현상과 국고보조사업 매칭액 확대가 겹치면서 강력한 세출구조조정이 요구될 수밖에 없다.

예결위원장으로서 도민을 대표하는 예산 감시자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하는 소명을 갖고, 미래세대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과 세입 확충을 통해 현재 세대의 시급한 민생안정 대책을 우선 고려한 예산 편성 방향의 양 날개가 균형 있게 나아가도록 하겠다. 큰 틀에서 몇 가지 방향을 제시해 본다면, 우선 자칫 예산 삭감 기조에 등 떠밀려 소외계층 민생 관련 예산 편성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심사할 계획이다. 또 모든 사업에 대해 원점 재검토·심사 기조를 견지해 연례 반복적 사업이라 하더라도

불필요한 예산 편성이 없는지 꼼꼼히 심사할 방침이다. 세입 확충 방안도 집행부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할 계획인데, 세수 결손에 대한 대책으로 누락된 세원 발굴과 세납액 징수를 독려하려 한다. 기금 간 자금 운용, 보유 자산 운용 등 가능한 한 모든 수단을 활용해 세입 확보를 위한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하겠다.

내년 예산은 세입 확충을 위해 과세표준 적정 여부 등 도세 취약분야 점검과 지방세 전수조사를 강화해 추가 자원 확보를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재정 투입 양상은 상당한 보수성을 띠며, 힘든 살림을 해야 될 것이다. 필자도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예결위원장직을 수행하고 있어 어깨가 더욱 무겁다. 작아진 공간 안에서 민생활력과 민생안정을 피해야 한다는 시급한 과제와 함께 장기적으로는 공간 크기를 불려야 한다는 책무가 있다. 재정한과 속 재정건전성 확보와 민생안정의 달레마에 빠져 있는 형국인데, 솔로몬의 지혜와 세밀한 재정 운용의 묘가 필요한 시점이다. 도민의 시각에서 가장 가깝고 아픈 부분이 어떤 것인지 낮은 자세로 항상 살피고, 건전한 재정의 기틀을 세우는 데 중점을 두고 예산 심사에 임할 것임을 약속드린다.

강원도민일보

“강원형 국제학교 도민이 수용할 수 있는 모델로”

강원특별법 3차 개정-국제학교 등 교육분야 특례 고도화' 토론회

교육자치로 학교 경쟁력 강화
외국·대안교육기관 활용 제언
공공교육기관 국제학부 검토도

강원특별법 3차 개정 특례발굴의 핵심 현안으로 지역상생과 맞물린 강원형 국제학교 설립 작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강원형 국제학교가 공공교육기관에서 구체적인 수요를 담아낼 수 있는 방안을 비롯해 도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강원형 국제학교 모델을 만들어 법개정을 하는 방안, 비인가 외국교육기관 및 대안교육기관을 활용한 강원형 융합적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강원특별자치도와 강원도민일보는 26일 오후 강원대 60주년 기념관 국제회의실에서 '강원특별법 3차 개정-국제학교 등 교육분야 특례 고도화'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국제학교 설립은 강원특별법 2차 개정 당시 중점 추진됐으나 결국 불발됐다. 2차 개정의 교육 부문은 '강원형 자율학교 운영 특례' 등 4개만 담겼다.

이에 따라 도는 국제학교 설립 특례안을 3차 개정에서 재추진, 제주 국제학교 모델과는 차별화되면서 지역상생

을 기반으로 도내 학생들의 교육경쟁력 강화 등을 중점적으로 해 강원형 국제학교를 설립하는 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조용호 강원연구원 객원연구위원은 '강원형 국제학교 쟁점과 특례방향' 발제를 통해 "외국인 교육수요가 미미하고, 제주형·송도형 국제학교 모델이 있는 상황에서 강원특별자치도의 현실에 맞는 강원형 국제학교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며 "교육자치를 통한 학교 경쟁력 강화와 글로벌 모델 정립, 비인가 외국교육기관 및 대안교육기관을 활용하는 강원형 융합적 제도 설계를 고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재금 광운대 교수는 "3차 개정, 국제학교 설립의 가장 큰 벽은 정부기관이다. 강원형 국제학교가 왜 필요한지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강원형 국제학교가) 공공교육기관에 구체적인 수요를 담아낼 수 있는 방안, 도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형태의 모델로 법개정 방향을 잡아야 한다"고 했다. 김상영 강원특별자치도 특별자치추진단장은 "도내 학생들의 학력 수준을 높이고 공공교육기관에서 국제학부를 운영하는 형식의 강원도만의 실험적인 방법도 검토해볼 수 있다"고 했다. 토론회는 이영욱 도의회 교육위 부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전문가 그룹이 참석해 진행됐다.

김중석 강원도민일보 회장은 인사말에서 "교육자유특구 지정을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점에 국제학교 설립 특례 등의 논의가 쉽지 않지만, 이 자리가 강원형 국제학교 모델을 만드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박지은·김덕형

▶ 관련사진 4면·상보 10월 4일자

강원도민일보



강원특별법 3차 개정 토론회 국제학교 등 교육분야 특례 고도화를 주제로한 강원특별법 3차 개정 토론회가 26일 강원대 60주년 기념관에서 김중석 강원도민일보 회장과 관련 학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서영

2023 09 26 ()

강원도민일보

"정책 실효성 의문 제기 인상적...농업인 이슈 집중 조명을"

본지 독자위원회 제2차 회의
강특별 조례 제정 과제 후속 보도
여성농업인 지원 정책 관심 필요
일본 고향사랑기부제 모범사례 등
유가 상승세 흐름 그래픽 눈에 띄어
지자체 노포 시리즈 기획 유익 "호평"
"춘천가정폭력상담소 중단" 보도 눈길
공공의료 인프라 부족 대책 제시
외국인노동자·탄소중립 다뤄주길

강원도민일보 2023년 독자위원회 제2차 회의가 지난 19일 강원도민일보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본지 독자위원들은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시행까지 남은 과제를 면밀히 살펴 이슈를 모으는 일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조언했다. 독자위원들은 지역 내 인구이동, 여성농업인 권익, 공공의료 인프라, 전국 이슈의 지역화 등도 주문했다.

김현옥 강원대 명예교수·작곡가(독자위원장) 예술가들은 무대에 서기 전에 보이지 않는 노력을 많이 한다. 신문제작 역시 사실 관계 확인과 오탈자 수정 등 매일을 무대에서는 작업이라는 생각이 든다.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열렸던 지난 회의 때 성공 출범을 위한 이야기들을 많이 나눴는데 벌써 출범 3개월이 지났다. 앞으로 남은 과제들이 더 많다. 모두 잘 해내서 "역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하기를 잘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도록 각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 독자위원들께서 지역 발전을 위한 고견이 있으시면 늘 공유해 달라.

▲ 강원도민일보 독자위원회

■강정호 도의원

강원특별자치도법이 3번 개정됐다. 처음에는 명칭을 잡는 정도였는데 지난 6월 전략을 잘 짜서 정부와 협의하고 전 도민이 협력하면서 기반을 잡았다. 진짜 중요한 시기는 이제부터다. 시행령과 조례 제정 등이 이어져야 한다. 허울뿐인 특별법이 되지 않으려면 강원도민일보를 비롯한 언론과 도민들께서 기존 노력을 넘어 더 많은 의견을 주셔야 한다. 농어업에서 여성은 없어서는 안되지만 행정에서는 관련 정책을 마지못해 하는 수준이다. 여성농업인 지원법은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문구도 명시하고 있는데도 지원은커녕 관심이 더 떨어지고 있다. 강원도의 여성농업인 권익에 대해 언론에서도 관심을 가져달라.

■이기대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장

최근 유가가 빠르게 오르는 추세를 그래픽으로 보여준 것이 좋았다. 가시적으로 흐름을 잘 추적한 것이 엿보였다. 도민일보를 온라인으로 보는 편인데 주말이 다가오면 이번 주말 어디갈지 찾아본다. 지역이나 기초지자체에서 하는 여러 축제 소개, 노포기사 등이 굉장히 유익했다. 요즘 언론들이 제목 장사를 세계하는 것이 느껴진다. '뉘시질'이 심한 분위기 속에 도민일보는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은 편이지만 대신 겹따옴표, 말줄임표의 남용이 보인다. 예를 들어 외신을 인용한 김정은과 푸틴 회담, 불특정 시민의 말들도 따옴표에 넣어 쓰고 있다. 신문은 젊은이들이 우리말을 배우는 학습도구이기도 하다. 예전과 (기사) 문법이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탁운순 강원이주여성상담소장·시인

여성폭력, 외국인, 젠더이슈 관련 중심으로 주로 보는데 지난 8월 3일 '국비공인 춘천가정폭력상담소 중단' 보도는 강원도민일보만 다뤘다. 특종이라고 볼 수 있었다. 해당 기사에 언급된 상담소는 춘천의 유일한 여성폭력상담소다. 향후 대안 등에 대한 후속기사도 이어지면 좋겠다. 9월 13일자 한국여성수련원장 청문회 보도에서 다뤄진 젠더이슈를 보면 아직 많은 부분에서 젠더 관련 의식이 많이 낮다는 것을 느낀다. 더 많이 조명 해달라. 최근 전국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 유일한 전문 상담소인데 대안이 있는지, 관련 기관 등에 예산을 넘긴다는데 일요일에만 시간이 나는 외국인 상담 수요를 어떻게 소화할지 의문이다. 관련 문제를 집중 보도해달라.

■ 함영이 작가

최근 황성의 한 학교 동문회장에 여성이 임명됐다는 보도가 가장 인상깊었다. 동문회장은 3D라고 할 정도로 책임이 무겁고 어려운 자리이므로 의미가 큰데 놓치지 않고 보도했다는 의미가 컸다. 여성농업인 임금이 남성보다 크게 낮은 사례 중에도 황성이 있다. 이 사례도 다루면 좋지 않을까 한다. 최근 보도 사진 중 하늘 풍경을 포착한 '천국의 문'이 화제였는데 독자 제보를 적극 보도해 인상깊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일본 현지에 가서 모범사례를 직접 보여준 것도 높이 평가한다. 최근 영동인구가 영서로 이동하는 현상도 주목해 볼만하다. 자칫 18개 시·군 내 갈등으로 강원특별자치도가 위기를 맞을 위험도 있다. 관련 처방을 선제적으로 해달라. 기자와 신문은 결국 브랜드가치로 유지된다. 현장에서 실수하면 가치가 망가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주었으면 한다.

■ 김택우 도의사회장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사건을 계기로 필수의료인력에 대한 화두가 떠오른지 1년 이상 지난듯하다. 정부가 TF를 구성해 요란을 떨었지만 대책은 전무한 상태다. 필수의료인력 기피하는 MZ세대의 미래선택기준을 살펴봐야한다. 삶의 질, 삶과 일의 균형감 등을 중시하는 세대다. 왜 필수의료진이 이탈하는지 원인을 살펴보고 해법을 내면 된다. 강원 영동지역은 심장내과교수가 이탈해 주민들이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다. 도와 지자체가 합심해 의료진 처우를 개선하고 정착을 도와야 한다. 영서북부에는 상급종합병원이 없다. 요건 강화보다는 지정되는데 힘 쏟아야한다. 의료원의 경우 코로나19 이후 경영이 어려워 개선책도 필요하다. 이들을 포함해 필수의료 문제와 도내 이탈의료진(필수과 교수)에 대한 대책을 계속 다뤄주었으면 한다. 시간이 더 된다면 건강보험재정이 얼마나 견딜 수 있을지에 대한 연재도 좋을듯하다.

■ 김진영 춘천 청년 커뮤니티 춘뿌리 대표

신문은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사회적 문제에 대한 비판적 시각과 다양한 의견을 준다. 독자들에게 사회 문제에 대한 깊은 이해와 더 많은 사고의 기회를 주는 매체다. 최근 읽은 기사 중 경찰 조직개편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다룬 것이 기억에 남는다. 이처럼 정부 등에서 진행하는 정책의 실효성, 윤리적 측면, 사회적 영향 등을 지역 차원에서 함께 다뤄주면 해당 분야 전문가 뿐 아니라 일반 지역 독자에게 더 가치 있는 정보가 된다. 필요한 시점의 사회적 논의 촉진, 개선을 위한 대화 유도에 기여한다. 지역 내 사건이나 행사 외에도 이슈 제기과 비판적 시각의 기사가 많아질수록 독자의 관심을 끌 것이다.

■ 김형숙 도농업인단체총연합회장

농업인에도 다양한 성별과 세대가 있다. 기존의 고령농업인은 물론 MZ세대, 여성농업인 등 농업계도 다양한 카테고리과 이슈에 대응해야 한다. 빠르게 진행되는 기후변화 위기 속에 강원미래농업이 나아갈 길도 함께 찾아야 한다. 현재 도내 여성농업인을 중심으로 농업인들은 농업현장에서 탄소 중립과 안전수칙 준수 활동 등을 선제적으로 하고 있다. 이에 발맞춰 행정과 민간 등도 힘 모아주면 좋겠다. 강원특자도 법안 시행 전까지 농어업 분야를 다시 다듬고, 정부의 주요 정책에 먼저 대응하도록 준비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지역 언론이 이슈 제기과 대안 마련의 역할까지 해주신다면 더욱 고맙겠다.

■ 송정록 편집국장

특별자치도 출범 당일 주말 특별호까지 발행하며 이슈를 쫓았다. 출범 이후에는 일본·프랑스·스위스 전문가들과 국제심포지엄도 했다. 지역에 책임만 넘어오는 부분이 과제로 남았다. 다음 달부터 국회와 지역순회하면서 특별자치도 후속내용을 어떻게 담을지 논의할 예정이다. 지역친화적인 지면, 예를 들어 지난 해 백두대간에 이어 노포시리즈, 소양강댐, 폐광지 등을 기획했다. 최근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컨퍼런스 공모를 통해 소양강댐, 폐광지역 시리즈 보도가 예심을 통과했다. 영상 등과도 협업해 뉴스 제작 방식을 다양하게 넓히겠다. 기사 제목과 작법은 실제 바뀌고 있다. 특히 온라인 보도는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 기사 가치 판단 등 기자들의 생각 회로도 바뀌고 있다. 낚시 기사를 되도록 자제하고 있지만 기사 주목도 등을 높이는 방안 등은 상식선에서 해결하겠다. 젠더이슈는 관심갖고 놓치지 않고 있다는 것을 계속 보여드리겠다. 농업이슈도 외국인노동자, 귀농귀촌, 첨단산업화 등으로 바뀌고 있지만, 여성농업인 관련한 이슈도 보완해 나가겠다. 공공의료문제의 경우 향후 6000개 병상이 수도권에 생기는데 의료인력유출 문제에 대한 대안도 마련해 보겠다. 지적사항은 지면에 소홀함 없이 반영하겠다. 정리/김여진·강주영

江原日報

2023 09 26 ()

[동정] 강정호.박호균 도의원

강정호(속초) 도의원은 10월2일 오후 3시 속초시 피노디아 아트갤러리에서 열리는 제2회 7인7색 사진회 사진전에 참석.

박호균(강릉) 도의원은 10월3일 오전 11시 강릉 구정초에서 열리는 제15회 구정면민 한마음축제에 참석.

2023 09 27 ()

江原日報

03

200일도 안 남은 총선

선거구 획정 안갯속

획정위 불부합 선거구 31곳
 도내는 1곳도 포함 안돼
 특례 적용 춘천권 갑을 변수
 인구소멸 반영 개정안 추진도

◇도내 선거구 인구수(1월말 기준)

선거구	인구수(명)
춘천철원화천양구갑	22만7,881
춘천철원화천양구을	14만5,580
원주갑	17만3,407
원주을	18만7,402
강릉	21만1,159
홍천횡성영월평창	19만3,075
속초인제고성양양	17만 109
동해태백삼척정선	22만6,760

내년 4월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 개편 논의가 국회에서 멈춰 있다. 적어도 연말까지 여야 협의가 쉽게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선거제 개편 및 선거구 획정’은 선거의 승패를 좌우할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현재까지 여야 모두 현행 ‘소선거구제’ 유지에 동의하는 분위기 속에서 강원특별자치도의 경우 ‘춘천시 단독 분구’를 고리로 재획정 가능성이 열려 있는 상태다.

■ ‘춘천 단독 분구’ 협상 테이블에 오를까=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획정위)가 내년 총선에 한 지역구에서 1명의 후보만 뽑는 현행 소선거구제로 치러질 경우 지역구 인구 범위를 초과하거나 미달해 합구, 분구 등 조정이 필요한 선거구를 31곳으로 집계했다. 강원도는 1곳도 포함되지 않았다.

22대 총선 지역구의 인구수는 하한 13만5,521명, 상한 27만1,042명이다. 2020년 21대 선거에서 춘천 남부지역은 ‘갑’으로, 춘천 북부지역 6개 읍·면·동을 때 접경지역인 철원, 화천, 양구와 붙인 ‘춘천-철원-화천-양구을’로 획정했다. 선거법상 하나의 지구구·시·군의 일부를 분할해 다른 지역구에 속하게 할 수 없지만(제25조) 특례를 두면서 예외로 허용됐다. 올 1월말 기준 ‘갑’지역은 22만7,881명, ‘을’지역은 14만5,580명으로 조정 대상은 아니다. 다만 지난 3년 동안 지역에선 지속적으로 ‘춘천 단독 분구’를 촉구해 왔기 때문에 재획정 대상으로 논의될 여지는 있다. 춘천시 인구는 28만6,

623명으로 인구상한을 넘긴다.

■ 1석 복원해도 인접지역 조정 불가피=현재 8석에서 9석으로 1석 증가시키는 것을 가정해 춘천 단독 분구를 추진할 경우 인접 지역구 전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인구수를 절대 기준으로 봤을 때다. 현행 기준 춘천시 갑·을, 원주시 갑·을, 강릉 등 3개 지역에서 5석을 갖게 되고, 나머지 15개 시·군의 인구수를 조합해 4개 선거구로 맞춰야 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 그러나 지속적인 인구감소 현상으로 철원·화천·양구(8만6,838명)를 묶어도 인구 하한선에 미달하지만 지역적 특성 및 면적의 특례를 뒤 한 지역구로 만들어 달라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 인구 감소 감안 선거법 개정 추진=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갑) 국회의원은 26일 인구소멸 위기와 거대선거구 문제 해결을 위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선거구 획정 기준에 인구소멸 지표와 선거구의 면적을 반영시켜야 하는 것이 핵심이다. 허 의원은 인구감소지역이면서 자치구·시·군의 면적이 큰 곳은 평균 인구의 100분의 90을 기준으로 해당 시·도의 지역구 국회의원 정수를 산정하도록 하고 이외 시·도는 100분의 110을 기준으로 해 인구소멸 위기를 높이자고 제안했다. 이하늘·이현정기자

江原日報

교권전담변호사 3개월 만에 공석 위기

**도교육청 2년만에 채용 불구
해당 변호사 사직 의사 표명
열악한 처우 탓 고질적 구인난**

교권 보호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의 교권전담변호사 자리가 3개월여 만에 또다시 공석이 될 처지에 놓였다. 현실에 맞는 처우 개선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최근 '일반임기제공무원(교권전담변호사)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를 냈다. 올 7월 2년 가까이 구하지 못했던 변호사를 채용하는 데 성공했으나 3개월여 만에 해당 변호사가 사직 의사를 표명한데 따른 것이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변호사는 이달 말까지만 근무한다.

교육청의 변호사 구인난은 수년 전부터 이어지고 있다. 교권침해 사안에 대한 법률상담 및 조사, 사후 지원 등을 도맡아 하는 교권전담변호사의 경우 2021년 8월부터 지난 7월까지 10번이 넘는 채용공고를 냈음에도 약 2년간 적임자를 찾지 못했다. 지원자가 거의 없는 데다 최종 합격을 하고도 임용을 포기하는 이들이 대부분이었다. 지난 5월 재공고에서는 6급 상당 직급에 급여를 5급 상당으로 올려 처우를 개선했지만 결과적으로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했다.

교권전담변호사뿐 아니라 원주와 강릉 등에서 근무할 '학교폭력대책 심의위원회 지원 변호사'도 구하기가 어려워 채용공고가 계속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다.

교육청이 변호사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유는 열악한 처우 탓이다. 도교육청이 제시하는 6급(일반임기제) 처우는 변호사들의 일반적인 평균 수입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 업무 역시 지문 성격에 가깝다 보니 변호사로서의 경력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다수의 의견이다.

교육계에서는 고질적인 변호사 구인난 해결을 위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학교 현장에서 갈수록 교권보호변호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변호사시장에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처우를 대폭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현실적인 처우 문제 때문에 채용에 어려움이 적지 않다"며 "빠른 시일 내에 교권전담변호사를 채용해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원선영기자 haru@

江原日報

道 호우·태풍 카는 피해 복구비 496억원 확정

피해액은 217억원 달해

강원특별자치도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올 6월 장마철 호우 피해 복구에 93억원, 8월 제6호 태풍 카는 피해 복구에 403억원을 지원하는 복구계획을 26일 확정했다. 6월 장마철 호우 당시 58억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으며 태풍 카는 당시에는 159억원의 피해가 있었다.

이에 따라 사유시설 피해 복구에 69억원, 공공시설 피해 복구에 427억원 등 국비 234억원, 도비 78억원, 시·군비 184억원 등이다.

지역별로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고성군에 270억원, 강릉시 38억원, 원주시 28억원 등 16개 시·군

에 226억원이다.

특히 고성군은 지방비 부담분 128억원 중 28억원이 국비로 추가 지원됨에 따라 지방비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

도재난안전대책본부는 신속히 예산을 편성하고 연말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는 등 내년 우기 전까지 주요 시설물을 단계적으로 복구한다는 계획이다.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피해지역 도민들이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시·군과 협업해 신속한 피해 복구를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며 "향후 유사피해 재발방지를 위해 근본적인 복구 계획을 수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기영기자 answer07@kwnews.co.kr

강원도민일보

2023 09 27 ()
01

사회적경제 기업 예산 급감... 강원기업 존폐 기로

내년 올해대비 60% 감소 전망
지역경제 전반 악영향 우려

역대 최대 규모 세수 감소 상황과 연계, 내년도 정부예산안에서 사회적기업 지원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으로 나타나 도내 사회적경제 기업들이 존폐 갈림길에 놓였다. 당장 내년부터 도내 사회적경제 기업에 지원되는 예산은 올해 대비 60% 가량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면서 각 기업들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26일 본지 취재 결과, 고용노동부는 제4차 사회적기업 기본계획을 최근 발표한 가운데 사회적기업 지원 체계를 '획일적 육성'에서 '자생력 제고'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정부 정책 변화로 중단되는 사회적기업 지원사업은 △일자리창출사업(2024년 종료)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올해 종료)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으로 확인됐다. 일자리창출사업은 최저임금 기준, 사회적경제기업 신규 채용자의 인건비를 40~90% 지원하는 사업이다. 총 사업비는 81억원(국비 75%·지방비 25%)이며 도내 사회적경제기업 202곳(515명)이 지원받았다.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예산은 6억원,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은 14억원이다.

이같은 정부 방침에 따라 도내 사회적경제 기업들의 혼선이 커지고 있다.

예비 사회적기업인 강릉 문화예술콘텐츠맥(대표 최윤정)은 사회적기업 인증에 나설 계획이었으나 정부 방침

에 따라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최 대표는 "지원이 줄어들면 사업 유지 및 확장에 어려움이 있다. 사회적기업 인증 계획을 재검토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원주 우리마더봉교육(대표 봉정여)도 마찬가지다. 봉 대표는 "개별 기업 문제가 아닌, 지역경제 전반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황선우·김덕형

강원도민일보

2023 09 27 ()
02

"양구~영천 남북9축 고속도 조기 건설 국가계획 반영을"

도시군의장협 정부 건의문 채택
국토 균형발전 차원 당위성 강조
황성 정운현 의원 의정대상 수상

강원특별자치도 시군의회가 남북9축 고속도로 조속 추진을 정부에 건의했다. 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협의회장 김일용 고성군의장)는 26일 원주시의회 모임방에서 제237차 월례회를 갖고 '남북9축 고속도로(양구~영천) 조속 추진을 위한 건의문'을 채택했다.

'남북9축 고속도로(양구~영천) 조속 추진'은 지난 7월 13일 국토교통부가 강원내륙 고속도로(영월~양구) 구간 사전타당성 조사 연구용역과 함께



강원특별자치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의장 김일용 고성군의장)는 26일 원주시의회에서 제237차 월례회를 가졌다. 사진 제공=평화경제연구원

남북9축 고속도로 논의를 본격화하며 이슈화되고 있다. 이날 심현정 평창군의장이 대표 발의한 이번 건의문은 도내 6개 시·군 주민의 염원을 담아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2026년~2030년)에 '남북9축 고속도로' 조기 건설 반영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협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지난 1991년 제3차 국토중

합개발계획에서 양구~부안 구간이 남북 6축으로 선정된 이후 32년간 남북9축을 경유하는 시군이 국토균형발전에서 소외됐다"며 "강원 영서, 경북 내륙

국민 염원을 받들어 지역 소멸방지, 국토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적 사명을 위해 이번 건설계획을 제3차 고속도로 건설 계획에 반영, 조속 추진해 달라"고 강조했다. 김일용 협의회장은 "국가 발전에서 더 이상 강원특별자치도와 도민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채택된 건의문을 잘 전달하고 조속한 추진을 위해 협조를 구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재용 원주시의장은 "지방인구 소멸 현안 등 18개 시군의 시급한 현안 해결을 위해 협의회에서 연론과 지혜를 모아 나가는 등 더 경쟁력 있는, 더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협의회는 이날 정운현 황성군의원에게 강원지방자치 의정대상을 수여했다. 권혜민

강원도민일보

2023 09 27 ()

05

화천 양돈농장서 또 돼지열병... ASF 4년째 현재진행형

도내 '위험기' 정밀검사서 확인
철원·춘천·양구 이동중지 명령
"야생멧돼지 탓 전 지역 오염"

화천군 하남면 소재 양돈농장에서 지난 25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한 가운데 햇수로 4년이 넘어가도록 농장 내 확산은 계속되고 있어 강원도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26일 본지 취재 결과 이번 확진은 강원특별자치도내 농장에 대해 ASF 발생 위험기를 맞아 실시한 상시예찰 정밀검사 과정에서 확인됐다. 지난 25일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화천군 원천리에 소재한 A 농장(사육규모 1569마리)의 21마리의 검사 시료 중 4마리에서 양성 개체가 발견됐다. 방역당국은 ASF 확산을 막기 위해 해당 발생농장에 초동방역팀을 파견해 현장 통제와 소독,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긴급 살처분과 매몰작업도 진행하고 있다. 또 발생농장 반경 10km 이내는 방역대로 설정했으며 방역대 안에는 양돈농가가 2곳(4000마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내 ASF 농장 내 발생 일시

2020년	10월 8일	화천군 상서면 다독리
	10월 9일	화천군 상서면 봉오리
2021년	5월 4일	영월군 주천면 용석리
	8월 7일	고성군 간선읍 해상리
	8월 15일	인제군 인제읍 가리산리
2022년	8월 25일	홍천군 내촌면 물걸리
	10월 5일	인제군 남면 어문리
	5월 26일	홍천군 화촌면 굴운리
2022년	8월 18일	양구군 국토정중앙면 청리
	8월 19일	춘천시 동산면 조양리
	9월 20일	춘천시 동산면 군자리
	9월 20일	철원군 동송읍 양지리
	11월 10일	철원군 동송읍 양지리
2023년	1월 11일	철원군 동송읍 양지리
	2월 11일	양양군 손양면 삼촌리
	7월 18일	철원군 갈말읍 토성리
	9월 25일	화천군 하남면 원천리



화천군 하남면 소재 한 양돈농장에서 지난 25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 방역당국이 차량통제 등 비상대처에 나섰다. 안의호

방역당국은 추가확산차단을 위해 이동 제한과 집중소독, 긴급 정밀검사를 병행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ASF 확산 방지를 위해 화천군과 인접한 경기 포천과 가평, 강원 철원·춘천·양구 등 5개 시군에 대해 이날 오전 0시부터 48시간 양돈농장, 도축장, 사료공장 등 축산 관계시설 중사 자 및 출입차량에 대해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내렸다. 강원도에서 처음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한 시점은 2019년 10월 11일이다. 철원군 원남면에서 ASF에 감염된 야생멧돼지가 발견된 이후 강원도는 햇수로 4년째 ASF와의 전쟁을 치르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서는 철원 등 대규모 양돈단지에서 확진이 발생하거나 기존에 발생이 없었던 양양 등

에서 확진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로써 도내 양돈농가 ASF 발생건수는 총 16건(화천 3건, 인제 2건, 홍천 2건, 영월 1건, 고성 1건, 양구 1건, 춘천 2건, 철원 3건, 양양 1건)으로 늘었다. 장기화된 ASF는 이제 어디서 어떻게 확산되는지도 알 수 없어 양돈 농가를 더욱 지치게 하고 있다. 배상건 대한한돈협회 강원도협회장 "정부와 농가

모두 장기화된 ASF에 지쳐가는 것은 맞지만 이게 전부고 생업인 양돈농가들은 어디서 감염되는지도 알 수 없는 상황에 망연자실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에도 방역당국 관계자는 "이미 ASF에 감염된 야생멧돼지로 인해 도내 전 지역이 오염돼있는 상황"이라며 "추가 확산 차단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안의호·김정호

강원도민일보

2023 09 27 ()

/ 19

인구 감소 지역 연대 지지한다

-정부 기형적 산업 편중 근본 해결책 내놓아야

인구절벽 위기 속에 전국 인구감소 지역 89개 기초지자체가 공동 대응에 나섰다. 전국 89개 인구감소 지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는 지난 25일 국회에서 창립총회 및 출범식을 가졌습니다. 이날 자리에는 우동기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장을 포함해 정부와 국회 인사들이 참석했으며, 이현종 철원군수 등 89개 인구감소 지역의 단체장이 함께해 지역 소멸 위기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불균형의 속도와 심각성을 고려하면 때늦은 감이 있지만, 소멸 위험에 처한 지자체가 힘을 모은다는 점에서 의미가 가볍지 않습니다. 협의회 출범을 계기로 국토균형발전 돌파구를 마련하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지역이 모두 잘사는 국가를 위해 정부가 근본적인 대책을 구상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지역 소멸 현상은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산업과 교육·의료, 문화, 행정의 수도권 집중이 가속화하고 인구가 밀집하고 있습니다. 반면 비수도권은 일자리 부족과 인구감소로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특히 강원도의 상황은 심각합니다. 지방 소멸 지수를 토대로 한 228개 시·군·구 인구변화 조사에서 도내 18개 시·군 중 10개 지역이 인구소멸 위기에 처했

고, 나머지 8개 지역도 인구소멸 단계에 접어드는 등 지역 존립 기반 자체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협의회 출범은 소멸 위기를 맞고 있는 지자체로서는 당연한 결정입니다. 협의회는 인구감소 지역이 직면한 위기를 도약의 기회로 삼기 위해서 함께 해결책을 찾아나가기로 했습니다. 위기 극복을 위해 지역별 인구감소 이슈·우수 사례를 발굴하고 중점 산업의 동반 성장 생태계 구축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협의회 활동이 지역의 회생으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하지만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들 지자체의 힘과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지역 노력이 단순한 외침과 호소에 머물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이 우선해야 합니다. 지역발전의 열쇠는 사실상 정부와 대기업이 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산업 분산에 대한 정부의 결단과 기업의 협조가 있어야 합니다. 대학과 교육의 분산도 중요합니다. 젊은이들이 불편 없이 생활하고 즐길 수 있는 의료 시설과 문화 인프라 등 기반 시설도 갖추어야 합니다. 정부는 과감하게 산업 분산을 결심해야 합니다. 다소 어려움이 따르더라도 균형발전이라는 목적을 이루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강원도민일보

2023 09 27 ()

/ 19

강원여행 경쟁력 '단풍' 살려야

-산림청 예측지도 발표, 도 '강원단풍지도' 내놓을 때

산림청에서 10월 하순부터 11월 초사이 단풍 절정을 맞을 것으로 전망되며 가을단풍 예측 지도를 내놓았습니다. 지역과 수종에 따라 단풍 절정 시기에 다소 차이가 있겠지만, 당단풍나무 중심으로 보면 작년보다 2일 정도 늦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주요산 중심으로 예측한 결과 강원이가장 이른 날짜에 올랐음은 물론입니다. 10월 23일 설악산을 시작으로 맨 마지막한라산 11월 1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여행 경쟁력이 사계절로 보면 '가을'에 있음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강원은 전형적으로 제조산업 기반이 허약한 경제구조여서 질적 양적으로 고소득의 안정적인 일자리가 매우 빈약합니다. 최근 일자리 추세를 보더라도 초단기직 일자리가 늘고 있을 뿐입니다. 고령층에 아르바이트로 불릴 정도의 비정규직 위주입니다. 자연지역 내부에서 순환되는 경기 흐름이 열악해 음식점업과 숙박업 등 소상공인들은 외부방문객에 기댈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지역경제 수입구조를 관광분야에 의존하고 있다 보니 방문자수 치에 매우 민감합니다.

이번 여름 동해안 방문객이 당초 예상치에 도달하지 못한 것은 물론 과거 코로나 대유행 이전의 수치에 비하면 똑 떨어지는 변화를 보였습니다. 봄철

엔 대형 산불, 여름엔 폭염과 폭우가 있었습니다. 겨울엔 스키 등 겨울스포츠가 있지만, 폭설과 한파 등 극한 날씨 탓에 따뜻한 지역으로 여행하려는 흐름도 있습니다. 올겨울도 이상 기후를 피해간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이런 구조적인 변화와 기후변동속에서 강원관광 경쟁력의 한 축에 가장 먼저 찾아오는 단풍에서 회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속도로에 비해 상대적으로 위축된 국도와 시군도 주변 마을에 활력을 주는 기회로도 손색없습니다. 10월 한달은 단풍을 살리는 자연 체험을 강화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줄 기회입니다. 그러자면 무엇보다 강원특별자치도는 단풍정보를 한눈에 보여주는 강원단풍지도가 필요합니다.

산림청에서 식물 관측 자료와 산악 관측 기상정보를 기반으로 예측한 것처럼 강원만의 단풍지도가 나와야 합니다. 둘째 단풍의 가치는 다름 아닌 숲과 산, 숲길과 산길 등 강원자연성을 부각하고, 그곳에서 살아가는 강원인의 삶과 문화를 공유하는 것입니다. 명산 마케팅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걷기 열풍에 부응하는 국가숲길과 백두대간길 등 총체적인 안내는 기본이고, 산촌인심과 정서 체험을 극대화하고 산성 등 문화콘텐츠가 뒷받침돼야 할 것입니다.

江原日報

2023 09 27 ()

/ 25

이대로 가면 지역소멸, 인구 대책 발상 바뀌어야

한국이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면 2750년 인구 소멸국가가 될 것이라는 저명한 인구학자의 경고는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준다. 인구학 분야 세계적 석학인 데이비드 콜먼 영국 옥스퍼드대 명예교수는 올 5월 방한, “한국 정부가 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문화를 바꾸기 위한 포괄적 복지 정책을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콜먼 교수는 2006년 유엔 인구포럼에서 “대한민국의 저출산 문제가 이대로 지속된다면 지구상에서 사라지는 최초의 국가가 될 것”이라고 예상

했다. 당시 한국 합계출산율은 1.13명이었으나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더 추락했다.

인구 대책에 발상의 전환을 하지 않으면 안

될 때다. 인구소멸과 지역소멸은 우리가 너무 쉽게 접하는 표현이 돼 버렸기 때문이다. 수십년간 계속된 수도권 일극화에 따른 지역 일자리 부족, 청년인구 감소, 지역소멸 위기의 악순환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인구 감소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강원특별자치도 12개 시·군을 포함, 전국 89곳의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이 뭉친 것은 늦었지만 시의 적절하다.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지난 25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창립총회 및 출범식을 가졌다. 협의회는 인구감소지역의 교류와 상생협력을 통해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을 목표로 활동에 돌입했다. 이들은 창립선언문을 통해 ‘행

정의 정책 전문성을 높이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치의 힘을 키울 것’ ‘인구감소지역 간 연대와 협력으로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할 것’ ‘국회와 중앙정부에 인구감소지역을 위한 제도 혁신, 정책 반영 및 예산 지원 등을 적극적으로 관철할 것’ 등을 다짐했다. 중요한 것은 실천으로 옮겨야 한다는 점이다. 그동안의 인구를 늘리기 위한 정책에서 탈피해야 한다. 즉, 정부와 자치단체의 노력이 일시적이고 제한적인 것에 머물러서는 곤란하다. 출산장려금 같은 금전적 지원 정책은 효과가

있더라도 지속가능하지 않다. 따라서 정부와 자치단체는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인구를 늘리는 데 효과적이다.

89곳 시장·군수·구청장, 인구 늘리기 나서

창립총회 및 출범식 갖고 연대·협력기로

지속가능하고 일관성 있는 대안 만들 때

어떤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국가가 양육을 책임지는 복지 정책을 꾸준히 시행한다는 믿음을 국민에게 줘야 한다. 또 기업들의 적극적인 역할도 빼놓을 수 없다.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유연한 근무환경을 조성하며 직장의 보육 지원을 확대하는 등 가족친화적인 업무문화를 기업이 앞장서서 만들어 나갈 때 인구는 증가한다. 한국이 빠른 경제 성장을 경험하면서 여성의 사회 진출이 크게 향상됐지만 직장 내 남녀 차별은 여전하고 가사노동과 자녀교육 부담이 여성에게 과도하게 지워지는 등 전근대적 가부장문화가 저출산 위기의 배경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의 인식 전환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다.

江原日報

2023 09 27 ()

/ 25

道 출자·출연기관, 더는 혈세 축내서는 안 된다

강원특별자치도 19개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경영 실적 평가 결과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인평원)과 강원관광재단이 S등급을 받았다. 두 기관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최고등급을 받아 우수한 실적과 역량을 입증했다. 태백기덕산풍력발전(주), 2018평창기념재단, 강원특별자치도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 (주)강원수출, (주)강원중도개발공사는 경영실적이 미흡한 C등급에 머물렀다. 태백기덕산풍력발전(주)과 2018평창기념재단의 경우 지난해 D등급에서 한단계 상승했다. 춘천 레고랜드 개발을 위해 설립된 (주)강원중도개발공사는 그동안 강원자치도의 보유 지분이 50%에 못 미친다는 이유로 경영평가에서 제외됐으며 올해 첫 평가를 받았다. 경영실적이 매우 미흡한 D등급은 민영화 방침이 정해진 (주)강원심층수 한 곳이었다.

이번 강원자치도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는 김진태 도정 출범 이후 사실상 첫 성적표다. 지난해 하반기 경영평가는 전임 도정 시절인 2021년 실적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이다. 2022년 도비 출연금은 436억원이다. 모두 도민의 혈세다. 경영실적이 부진한 기관에 대한 구조조정 또는 경영컨설팅이 요구되는 이유다. 3년 연속 하위 평가를 받았다면 그간 스스로 방만한

경영 개선책을 찾기 위한 뼈를 깎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손질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따라서 도 차원에서 직접 경영 정상화를 위한 컨설팅, 조직 정비 등을 시행하는 것은 당연하다. 중요한 것은 인적 쇄신을 위한 구조조정이 아니라 제대로 된 조직으로 설립 취지에 맞는 공공기관의 위상을 갖추도록 하는 일이다. 이번 기회에 도 출자·출연기관들이 도민과 지역 발전을 위한 조직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지방정부 산하 기관의 경영 부실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러나 지방정부의 출자·출연기관 개혁은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번에는 빈틈없는 구조개혁으로 산하 기관의 경영효율을 기하기 바란다. 올해 최하등급을 받은 강원심층수와 C등급인 강원수출은 민영화 수순을 밟고 있다. 또 강원도경제진흥원과 일지리재단, 강원문화재단과 도립극단은 통합된다. 여기에 그쳐서는 안 된다. 기관장의 자질 검증과 인선 절차에서부터 적자 투성이 경영 전반에 이르기까지 근본적인 대수술을 통해 강원자치도 출자·출연기관이 환골탈태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일부 기관장 등도 낙하산 인사라는 비판을 받아온 만큼 자치단체장 측근 인사보다는 능력 있는 인사들을 기용해 조직 혁신의 바람을 일으켜야 할 것이다.